

# 사회영역에 있어서 한일간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

- 사회·교육·행정·법률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search Products of Each Other Between Korea and Japan  
- With an Emphasis on the Social Fields -

최 정 태(Jung-Tai Choe)\*\*

## < 목 차 >

- |                         |            |
|-------------------------|------------|
| 1. 서론                   | 나. 교육분야    |
| 2. 시기구분에 따른 지식정보의 생산 경향 | 다. 행정분야    |
| 3.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분석       | 라. 법률분야    |
| 가. 사회분야                 | 4. 요약 및 결론 |

## 초 록

이 연구는 지난 100년 동안(1901-2000년) 韓日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 생산해온 학술적 성격의 지식 정보자원을 선별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서지학적 관점'에서 양국의 관심분야와 연구성과를 분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사회영역 중 사회·교육·행정·법률분야에 초점을 두고 연구의 시기별, 주제별, 생산주체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대상은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902종(사회 269종, 교육 118종, 행정 273종, 법률 242종)과 일본에서의 한국연구 2,025종(사회 1,060종, 교육 87종, 행정 620종, 법률 258종)을 중심으로 하였다.

주제어 : 한일, 한일관계, 지식정보, 생산현황, 정보관리

##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materials which Korea and Japan have investigated about each other during last 100 years(1901-2000). To the end, we collected monographs and constructed DBs('Korea-Japan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Using it, this study analyzed a characteristic of the publication period, subjects, and producers from a bibliographical point of view. In particular, this study concentrated upon the subject of sociology, education, public administration, and law fields.

Key Words : Korea, Japan, information resources, information management

\* 이 논문은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98-005-C00479)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tchoe@hyowon.pusan.ac.kr)

· 접수일 : 2002. 5. 12 · 최초심사일 : 2002. 6. 7 · 최종심사일 : 2002. 6. 12

## 1. 서론

韓日 양국은 서로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나라 중의 하나였으며, 그들 간의 관계는 과거를 넘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국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서로가 서로를 “가깝고도 먼 나라”로 통칭하는 것을 보면 지리적으로 가깝게 있지만 관념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이 두 나라는 1천 500여년전(A.D. 5c) 古代 소 국가群 때부터 관계가 깊어져<sup>1)</sup> 역사적, 문화적으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20세기를 마감하면서, 국민들 상호 간의 이질화된 역사인식과 문화바탕의 차이로 가까운 이웃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먼 나라로 유리되어 있는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한반도와 일본열도와의 십 수세기 간의 긴 관계사에서 지난 20세기 초, 한국은 40년 동안 日本帝國에 의해 고통과 시련의 암흑기를 겪었다. 마침내 한국은 해방이 되었지만 일제시대에 형성된 植民史觀을 극복하지 못하고 ‘反日’감정으로 이어져 일본을 적대시하였으며, 일본 또한 식민통치에 대한 깊은 반성도 없이 과거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反韓’ 또는 ‘嫌韓’ 등으로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결국, 쌍방은 20년 간 斷絶의 시기를 경험하였다.

그 후, 양국은 미국의 대 동북아정책과 주변국의 상황 그리고 자국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1965년 ‘韓日基本條約’을 체결하면서부터 상대국을 관찰 탐색하는 시기가 또 20년 간 지속되었다. 이 기간 동안 과거청산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과동 등 현안사항 등 걸림돌이 있었지만 한국경제의 급속적인 성장으로 양국은 경제교류와 함께 국민들의 이해도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중반, 사회주의의 몰락은 1945년 終戰이후 진행되어 오던 미·소 대립구조가 세계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곧이어 소련이 붕괴되고 군사력의 미국패권화가 이루어지면서, 일본의 경제력 부상과 함께 신 국제경제질서가 한일간의 협력을 촉진케 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여행의 자유가 제도화되고 양국의 국민들은 상대국을 직접 체험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호간의 관심은 다시금 交隣의 시기로 이어지고, 그 가능성은 새로운 21세기에도 계속해서 유지될 것임에 틀림없다.

두 나라 관계사가 이와 같이 진전되기까지는 그 동안 국제정세의 변화와 주변국의 영향, 양국의 경제발전에 기인한 것이지만 한일관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역할이 큰 몫을 차지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 동안 양국의 학자들은 그들의 취향과 전공영역에 따라 다각적인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상대국에 대한 많은 지식정보자료를 생산하였다.

연구자는 지난 한 세기, 100년 동안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따라 지식정보의 축(axis)이 어느

1) 이진희, 강재연 공저, 『한일교류사』 (한국어판). 학교재, 1998. <한국과 일본의 교류사연표> 245쪽.

분야에서 어떻게 변모되어 왔는지 연구생산한 자료를 중심으로 그 특성과 흐름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지금 한일간의 관계가 사회저변에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학술활동 및 지식정보차원에서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흔히 말한다. 최근에 발행한 『한겨레21』에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일본연구는 아직도 멀었다”<sup>2)</sup>고하면서 1980년대 중반이후 연구는 양적으로는 증가했지만 자족적 연구기반이 미비하고 객관적 미흡 등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고 커버스토리로 보도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본 논문에서 논증해보는 것이 부차적 목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 100년 동안 사회영역 중 특히, 사회·교육·행정·법률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일본연구를 그리고 일본에서의 한국연구를 수행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을 조사하고, 그들이 생산 유통시킨 학술적 성격의 지식정보자원을 선별적으로 수집하여 사회변동에 따라 지식정보의 흐름을 ‘서지학적 관점’에서 그 특징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연구의 시기는 1세기동안 사회 변동현상을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고<sup>3)</sup>

제1기 : 식민통치시기(1905~1945)

제2기 : 단절의 시기(1946~1964)

제3기 : 탐색의 시기(1965~1984)

제4기 : 교련의 시기(1985~2000)

연구대상의 유형과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한다.<sup>4)</sup>

첫째,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자는 국내의 학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작성 발행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일본에서의 한국연구도 같은 조건으로 현재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在日同胞를 포함해서 순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대상자료의 범위는 서기1901년부터 2000년까지 한일 양국이 상대방에 대하여 저술한 지식정보자료 중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단행본(monograph)으로 한정하되, 번역서와 편역서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다.

2) 『한겨레21』 커버스토리. 제 355호(2001.4.26)

3) 근대 한일관계 연구사에서 시기구분을 통상적으로 3기로 구분한다. 어떤 이는 제1기 무관심시대(1945~1965), 제2기(1965~1987), 제3기 문화적 관심시기(1988~현재까지)로(정하미, “日本研究 類型的 同時代史的 考察”, 《鄭場日本學》 제8집(2000. 2), 73-83쪽)구분하고, 또 어떤 학자는 ①암흑기(1945-1964), ②태동기(1965-1985), ③발전기(1986-현재)로 (김용숙, “韓國에 있어서 日本教育研究”, 《日本學報》 제30권(1993), 180쪽)구분하지만, 韓國日本學會에서 공백기(1945-1964), 태동기(1965-1980), 소년기(1981-현재까지)로 나누는데 많은 학자들은 동의한다.(《日本學報》(학회창립 20주년기념 특집호), 종합토론 “韓國의 日本研究 어디까지 왔는가”, 제30집[1993], 195쪽). 그러나 연구자는 시기의 골격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되 시기구분의 명칭을 고치고, ‘식민통치시기’를 확장하여 4기로 구분코자 한다.

4) 이 논문은 『20세기 한일간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분석』 속에 진행되는 분과논문에 속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성격에 맞춰 자연과학을 제외한 인문·사회과학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 2. 시기구분에 따른 지식정보의 생산 경향

제1기, 植民統治時期(1905~1945), 그 이전 일본에서의 한국학은 韓末의 각종 기행문, 일본 관리들의 보고서 등이 늘어나면서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한국을 식민지로 건설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일본 東京帝國大學의 東洋史學科를 졸업한 우수한 인력을 朝鮮史研究에 투입하는가 하면 總督府, 京城帝國大學, 朝鮮史研究會, 中樞院 등을 통하여 많은 연구물을 생산하였다.<sup>5)</sup>

1910년 日帝는 朝鮮總督府를 설치한 후, 식민지 조선의 역사, 지리, 풍습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지식정보자원을 수집하는 한편, 정보자료를 생산하여 지금까지 이어온 역사와 전통을 왜곡, 말살시키며 재해석하는 연구를 거국적으로 수행하였다. 예컨대, 일제시대 朝鮮總督府가 발행한 2,362종의 機關刊行物<sup>6)</sup> 중 이번 조사에서 집계된 단행본은 1,193종으로, 한일관계사 100년 동안 과반수이상(59%)의 발행량을 차지한다.<표 1> 이러한 자료들은 거의가 식민통치의 목적을 고수하기 위하여 생산한 결과물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물을 중심으로 일제시대 지식정보정책과 생산 간행물 분석에 관한 연구는 연구자의 앞선 논문<sup>7)</sup>에서 이미 밝혔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논급치 않기로 한다.

한편, 식민통치시기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유형은 ‘惡의 摘發’이나 ‘抗爭’이 연구대상이 되는 것이 특징이며, 世論이나 민족감정에 의해 연구가 출발되는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sup>8)</sup>고 했지만 주권이 말살된 식민지국에서 일본을 연구한다는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제2기, 斷絶의 時期(1946~1964)는 양국이 국교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았을 뿐 더러 한국에서는 반일감정이 드세어 일본자체연구가 백안시되어 일본에 대한 연구 내용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이때 일본에 관한 官撰資料로서 법전 및 법규 따위와 정부기관의 조직 및 관리행정을 소개하는 책자가 몇 종 발행되었고, 민간출판사에서는 『戰後の 日本』(동지사, 1948), 『日本の 眞相』(새문화출판사, 1956), 『일본관리』(수학사, 1962) 등 극소수의 단행본을 펴내 일본사회 실상을 안내하는 정도에 그쳤다.

5) 三枝壽勝, "日本에 있어서의 韓國語教育 및 韓國學", 『海外韓國學研究現況』(水原大鐵甸文化研究所) 1990. 15쪽. (이때 대표적으로 참여한 인물은 末松保和, 今西龍, 小田省吾, 池內宏, 中村榮孝, 田保橋梁, 前間恭作, 鮎貝房之進, 金澤莊三朗, 小倉進平, 河野六郎, 善生榮助, 久間健一 등이다.)

6) 朝鮮總督府가 발행한 기관간행물은 單行本 1,083종, 叢書 100종, 叢書 개별 타이틀 717종, 年報타이틀 402종, 雜誌 타이틀 60종 등 모두 2,362종에 이르고 있다. (『舊植民地關係機關刊行物總合目錄 朝鮮編』. 東京: アジア經濟研究所, 1974.)

7) 崔貞素, "朝鮮總督府의 知識情報政策과 刊行物 分析", 『韓國民族文化』(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제17집(2001.9), 121-287쪽

8) 新井通也, "日本研究の粹組み", 『日本研究』10輯(平成6).

그리고 한국전쟁의 와중에 창간된 월간지 『思想界』 1954년 2월호에 「日本の 不義와 東洋의 理想」이 대중지로서 처음 소개되었다. 그 후, 이 잡지는 1958년 2월호에 「日本見聞記」를 싣고, 같은 해 7,8월 특집호에서 「오늘의 日本」을 실었다. 곧이어 『東亞日報』, 『朝鮮日報』 등에 '日本'이 소개 분석되고, 戰後 일본 사회전반에 걸쳐 국내 여러 정기간행물의 특집 기사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이시기 20여년 동안 사회영역에서 발행된 일본관계 단행본은 官, 民 간행을 모두 포함해도 10여종밖에 되지 않아 학문의 공백기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일본에서도 한국연구의 공백기는 마찬가지였다. 국교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전쟁의 상흔을 벗어나 戰後復舊와 발전에 전념하느라 한국을 연구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본다. 그리고 당시는 일본인 연구자가 한국에 대한 연구여건이 미비했음은 물론 1960년대 일본의 많은 지식인들은 북한에 대하여 보다 공감적이었다고, 군사정권의 정치체제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현상에 관한 연구는 당연히 부진하여 이때 발행된 단행본수도 한국 사정과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십 수세기 간 양국의 관계사에서 볼 때 이 시기는 유래가 없는 단절된 기간이었다.

제3기, 探索의 時期(1965~1984)는 1965년 '한일조약' 체결에 따라 그 동안 적대시해 온 국민들의 반일정서가, 필요한 이웃으로 출발하는 기간이었다. 마침내 1972년 한국 고등학교에서 日本語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게 되고, 이듬해 한국외국어대학 대학원과정에 日本語科를 신설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연구대상으로 격상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 사회영역 단행본은 불과 130여종으로 학문적 시점에서 볼 때 여명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1964년 '도쿄올림픽'과 함께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라 다수의 일본인이 한국을 방문한다. 이때까지 팽배했던 부정적 견해가 1980년대 들어 한국의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정치사회의 민주화 진전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반전되어 학자들의 시선이 한국을 지역연구(area studies)의 제 3국으로써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학문의 성과 면에서 볼 때, 이 시기 사회영역자료는 모두 160여 종에 불과해 한국과 동일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제4기, 交隣의 時期(1985~2000)는 1985년 '韓日國交正常化 20周年'을 계기로 일본에서 '한국 붐'이 조성되고 일본의 관광객과 유학생이 대거 증가되는 시점부터 시작했다. 이러한 주변의 관심있는 사람들과 연구인력 확산에 따라 1990년대 초, 日本 文部省의 大學改革政策은 한국학연구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게 된다. 대학에 國際文化學部가 신설되면서 한국학 강좌도 늘어나고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지식사회의 주요구성원으로 등장하면서 일본에서의 한국학 연구는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한국에서도 일본의 학습 열이 높아지면서 1988년 '서울올림픽'과 함께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라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가 일본인의 한국 방문자 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보고

9) 정하미, “日本研究 類型的 同時代史的 考察”, 77쪽.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3권 제 2호)

가 나오기도 했다. 양국 간의 교린을 위한 발전추세는 학문에서뿐만 아니라 관광, 패션, 영화 등 문화적 교류가 확산되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술연구 등 지식정보의 접촉과 유통까지 활성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호간의 관심은 20세기를 보내고 앞으로 21세기에 도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관계 100年史에서, 이 시기 15년 동안 발행된 사회영역 도서는 일본이 500여종, 한국이 750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한 것은 양국의 관계사가 정립되고 쌍방 간의 연구활동이 유명기를 지나 활착기에 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사회영역(사회·교육·행정·법률분야)에서 100년 동안 시대구분에 따라 발행된 단행본 수는 한국의 일본연구서가 902종이며, 일본의 한국연구서는 2,025종으로 나타나 일본은 한국에 비해 계량적 수치로 2배를 상회한다(<표 1>)

<표 1> 한일간 시기별·주제별 발행현황 (단위:발행종수)

구분	발행년도	사회	교육	행정	법	계	시기별비율
한국	제1기(1900-1945)	1	0	0	0	1	0.1%
	제2기(1946-1964)	2	0	4	5	11	1.2%
	제3기(1965-1984)	37	15	36	46	134	14.9%
	제4기(1985-2000)	228	103	229	190	750	83.1%
	발행년미상	1	0	4	1	6	0.7%
	계	269	118	273	242	902 (100%)	
	주제별 비율	29.8%	13.0%	30.3%	26.9%		
일본	제1기(1900-1945)	530	19	453	191	1,193	59.0%
	제2기(1946-1964)	10	1	1	0	12	0.6%
	제3기(1965-1984)	110	17	15	20	162	8.0%
	제4기(1985-2000)	379	50	49	36	514	25.3%
	발행년미상	31	0	102	11	144	7.1%
	계	1,060	87	620	258	2,025 (100%)	
	주제별 비율	52.4%	4.3%	30.6%	12.7%		

참고자료 : 「한·일 관계에 관한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분석」(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제1~2차년도(1998~2000)연구과제 중간보고서에서 보완발췌

우선, 시기별 발행현황을 보면, 제1기 일본이 식민통치를 위해 朝鮮總督府와 官邊단체가 발행한 단행본은 1,193종인데 비해, 한국에서는 1928년 김태진과 L.A. Miller가 共著로 하여 朝鮮耶蘇敎書會가 발행한 『日本の發展』이 유일하다. 동시에 이 책은 사회영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일본관계서이다. 피지배국 국민이 지배국을 연구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지만, 식민통치 40년 동안 침략국에 관한 자료가 비록 '일본의 발전'을 알리는 것이라도 사회영역에서 단 1권뿐이라는 것은 의외의 사실이다.

제2기가 되면, 식민통치시대에 왕성했던 일본의 조선연구는 갑자기 정지된다. 한국 또한 식민잔재의 여파가 그대로 이어져 20년 간 한국과 일본이 생산한 자료는 각각 10여종에 불과하여, 서로가 무관심하고 적대시한 기간을 보냈다.

제3기에 와서, 양국은 상대방을 재해석하고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렇지만 20년 동안 한국이 134종을, 일본이 162종 밖에 간행치 못해, 이 시기 지식정보의 생산, 유통 면에서 맵아기 또는 태동기로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제4기, 사회과학분야 특히 사회(사회복지 포함)·교육·행정·법률분야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생산량이 750종으로 전체 902종의 83%가 이 시기에 간행되었고, 일본도 전체 2,025종 중 25%인 514종이 이때 발행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 양국 간의 출판량은 한국이 의외로 일본보다 236종이 더 많아 한국이 계량적 수치로 일본을 추월하고 있다.<sup>10)</sup>

이와 같이 제4기 이후, 한국이 양적 팽창이 확대된 動因을 찾아보면, 첫째, 선진국 일본을 모델로 한 '파라잡기'식의 저돌적 활동, 둘째, 실용성에 입각한 일본사회에 대한 관심증폭과 일본산업 및 지식의 수요급증, 셋째, 日本留學派의 귀국과 국내대학에서 日本學科의 급진적 증설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 국내 대학에 설치된 일본관련학과는 1961년 설치된 한국의대를 비롯한 2개 대학과 1965~1984년에 설립된 44개 대학, 그리고 1985~2000년 사이에 설치된 48개 대학의 것을 합치면 모두 94개교에 이른다. 이중 1998년 당시 박사학위과정이 15개교, 석사과정 18개교이던 것이, 3년 후 2001년 현재, 교육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에 설치된 석사학위과정 이상의 일본관련학과는 46개교로 증가되었다. 동시에 박사학위 취득자도 계속 증가하면서 다수의 전문연구자가 급진적으로 배출되고 있다.<sup>11)</sup>

이처럼 일본관련학과와 급증으로 연구활동이 촉진되면 지식정보자료의 생산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다. 따라서 최근 언론 등에서 지적된 "일본연구 아직도 멀었다"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양국의 간행물을 주제별로 고찰해 보면, 우선 한국에서 출판한 사회영역 도서 902종에서 사회(사회복지 포함)분야가 269종(29.8%), 교육분야가 118종(13.0%), 행정분야가 273종(30.3%), 법률분야가 242종(26.9%)의 순으로 발행되었다. 한편, 일본에서는 2,025종 중 사회분야가 1,060종(52.4%), 교육분야가 87종(4.3%), 행정분야가 620종(30.6%), 법률분야가 258종(12.7%)순으로 발행되었다. 이를 발행 量의 순에 따라 주제별로 비교해보면, 한국과 일본은

10) 또 다른 분석방법으로, 한일간 100년사에서 해방 전(일본에서는 終戰)45년과 해방 후(일본은 戰後)55년으로 兩分했을 때, 해방이후 사회영역 전 분야에서 한국에서의 일본연구(902-1=901종)가 일본에서의 한국연구(2,025-1,193=832종)보다 훨씬 앞서는 결과가 나타난다.

11)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일본자료센터(Japanese Documents Center) 홈페이지[<http://sias.snu.ac.kr/japan>]에서 자료 발췌

똑같이 사회, 행정, 법률, 교육분야의 순으로 자료를 발행하였다. 그 중 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양국이 30%로서 비슷한 비율로 유지하는데 사회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 29.8%인데 비해, 일본이 52.4%로서 과반수의 자료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에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이 13.0%를 차지하지만 일본은 4.3%에 불과한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위에서 분석한 내용은 단행본을 가지고 계량적 發行量만으로 조사하였고 질적 분석연구는 배제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이 자료만 가지고 각 분야별 연구활동의 輕重을 선별 리 판단하거나 양국의 학문수준을 가볍게 확정짓는다는 무리일 수 있다.

### 3.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분석

#### 가. 사회분야

##### 1)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社會’, 다의적으로 쓰이는 말이나 국민적 규모의 전체사회를 뜻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와 대립적인 개념으로 시민사회를 가르치기도 하며, 몇몇 집단이 구성하는 자족적 결합이 강한 連帶를 뜻하기도 한다. 사회과학의 추상적 개념으로 인간의 결합생활인 공동인간을 뜻하며 사회에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다양한 차이가 있다.<sup>12)</sup>

이러한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학은 舊韓末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되었다. 해방직후 일본 학계에서 歐美의 사회학 이론을 취사선택하여 해석한 것을 국내에 재수입한 것이 주를 이루었고 한국전쟁 이후부터는 미국사회학이 물밀 듯이 직수입되어 초창기 한국 사회학계의 공간을 모두 차지해 버리게 된다.<sup>13)</sup> 한국사회학이 그 토착과정에서 가지접목을 통해 외래이론을 받아들임으로써 한국사회라는 토양에 뿌리깊은 나무로 성장하지 못했다. 해방 후 한국사회학의 발전경로에서 나타나는 이론교육상의 일반적 경향은 일본을 통해 중역적으로 도입되었다.<sup>14)</sup> 그만큼 한국사회는 지난 한 세기 간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본사회를 연구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은 상당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사회분야 도서 269종을 확인하였는데 집필한 개인저자는 120명<sup>15)</sup>이었다. 그 중 일본에서 장기체류 했

12) 『中央大百科』, 중앙일보사, 1988, 912쪽

13) 김정근, 『한국사회과학의 탈식민성 담론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식산업사, 2000, 183-184쪽

14) 임현진, “사회이론교육의 과제”, 『한국사회학』 17집(1983), 12-16쪽.

15) 이 숫자는 단체저자를 제외한 개인저자를 일일이 확인한 것이다. 이후 교육·행정·법률분야의 저자 수에 대해서도 개개 확인하여 밝히기로 한다.



거나 공직 또는 저널리스트로서 일본 사회를 직접 체험, 거기서 얻은 문화현상을 비교하여 4~5종 이상의 책을 펴낸 조양욱(일본문화연구소 소장)<sup>16)</sup>을 비롯하여 서현섭(주일 후꾸오카 총영사, 현재 주 교황청대사관 대사)<sup>17)</sup>, 선일구(한일문제연구소 소장)<sup>18)</sup>, 이도연(한국논단 대표)<sup>19)</sup>같은 사람과 한일간의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실용성 자료를 낸 이<sup>20)</sup>, 순수 사회학자로서 과거 식민지시대를 비판하거나<sup>21)</sup> 일본근대화를 해부한 학자<sup>22)</sup>들은 일본사회를 연구하는 대표적인 전문가로 볼 수 있다.

## 2) 일본에서의 한국연구

사회분야에서 일본의 한국연구는 상당히 앞서고 있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사회분야는 1,060종으로 4개 분야에서 과반수(52%)를 차지하여 물량적으로 한국(269종)에 비해 4배나 연구량이 많다. 이는 단체저서가 아닌 개인저서의 경우에도 505종이며 집필한 저자 수에 있어서도 417명에 이르러 한국보다 2배에 달하고, 연구자 수도 한국 대비 3.5배에 달하여 일본에서의 한국연구는 월등히 앞서고 있다. 개인적으로 한국사회관계 저서 17종을 간행한 黒田勝

- 
- 16) 『두시간 거리 이십년 세월 : 한글세대 현직기자 본 한일비화 이십년』. 한밭출판사, 1984. ; 『일본 리포트 : 한글세대특파원의 신 일본탐험』. 청한문화사, 1991. ; 『천의 얼굴 일본·일본·일본 : 한글세대특파원의 신 일본탐험』. 청한문화사, 1993. ; 『일본리포트』. 청한, 1993. ; 『쌈지 속에 담긴 일본이야기』. 고려원, 1996. ; 『일본 키워드77 이것이 일본이다』, 히라이 히사시 역. 고려원, 1996. ; 『욕하면서 배우는 일본 : 조양욱이 털어놓는 일본,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배틀북, 2000.
- 17) 『근대한일관계와 국제법 수용』. 범신사, 1988. ; 『일본은 있다』. 고려원, 1994. ; 『일본인과 에로스』. 고려원, 1996. ; 『일본인과 천황』. 고려원, 1997.
- 18) 『일본의 진상』. 새문화출판사, 1956. ; 『대일타개의 기본문제』. 한일평론사, 1961. ; 『꿈에의 도전 : 나는 이렇게 일본을 봤다』. 흥미사, 1966. ; 『현대 일본의 연구』. 극동문화출판사, 1979. ; 『전환점에 선 일본의 참모습』. 극동문화사, 1979.
- 19) 『동경통신』. 범서출판사, 1984. ; 『일본의 재군비 : 그 실상과 의도에 대한 하나의 분석』. 한일문화교류기금, 1987. ; 『(한일교섭비화)흑막』. 조선일보사출판국, 1987. ; 『일본 다시보고 생각한다』. 조선일보사, 1988.
- 20) 황백현(시민운동가, 극일운동시민연합의장)의 『왜 우리가 일본을 경계해야 하나?』. 국민독서운동회, 1990. ; 『보라! 일본이 다시 이 땅에 쳐들어 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일! : 경제편』. 극일운동 시민연합창립준비위원회, 1990. ; 『일본교과서 한국역사왜곡의 실제』. 국민독서운동회, 1992. ; 『일본 보따리무역 창업 가이드』. 민예사, 1999. 등.
- 21) 예를 들면, 서울대 사회학과 신용하교수의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을유문화사, 1985. ; 『신 일본 패권주의와 한일관계』. 김영사, 1993. ; 『일제 경제침략과 국제보상운동』. 아세아문화사, 1994. ; 오두환 공저, 『21세기 한국과 최선진국 발전전략 : 한국이 미국, 일본, 독일을 추월하는 길』. 지식산업사, 1995. ;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문학과지성사, 1998. 같은 것.
- 22) 한배호(고려대 교수)의 『일본 근대화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 『현대일본의 해부』. 한길사, 1978. ; 『일본근대사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9. ; 『일본식민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1980. ; 『일본 정책 결정의 해부』. 정음사, 1984. 등.

린<sup>23)</sup>을 비롯하여 關川夏央<sup>24)</sup>와 瀧澤秀樹<sup>25)</sup> 등은 근대한국 사회를 전문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和田春樹<sup>26)</sup>는 분단시대의 남북문제를 주로 연구하여 그의 『朝鮮戰爭』은 사회적 力著로 평가받고 있으며, 田中明과<sup>27)</sup> 戶田郁子<sup>28)</sup>은 서울생활을 일본사회에 소개하는데 일조하였다. 이들 연구의 주류는 일본인의 시각으로 한국사회 저변을 평가하는 자료가 주종을 이루는데, 여기에는 대개 親韓과 反韓的 見解가 양분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在日한국인 학자 중 원로교수들의 연구성향은 일제침략을 규탄, 재확인하는 연구<sup>29)</sup>에 중점을 두고, 반면에 신진학자들은 실용성에 입각하여 당면과제와 미래지향적 연구<sup>30)</sup>를 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 개인의 업적(저서)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인으로서 한국사회를 연구하는 사람은 상당수 있다. 발췌한 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sup>31)</sup>

- 23) 『韓國社會をみつめて 似て非なるもの』. 亞紀書房, 1983. ; 『ソウル原本驗 韓國の生活を楽しむ記』. 亞紀書房, 1985. ; 『ソウル發これか韓國だ』. 講談社, 1985. ; 『韓國人の發想 コリアン パワーの表と裏』. 徳間書店, 1986. ; 『韓國社會をみつめて 似て非なるもの』. 徳間書店, 1987. ; 『韓國人の發想 コリアン パワーの表と裏』. 徳間書店, 1987. ; 『ソウル發 これか韓國だ』. 徳間書店, 1987. ; 『ソウル街ものがたり, この明るさと切と』. ネスコ, 1988. ; 『新韓國人の發想』. 徳間書店, 1988. ; 『ソウル原體験』. 徳間書店, 1988. ; 『板門店の壁は崩れるか』. 講談社, 1990. ; 『朝鮮半島の世紀末 ソウル發最新レポート』. 東洋經濟新報社, 1992. ; 『ソウル烈烈! 韓國をみつめつける珠玉のコラム集』. 徳間書店, 1993. ; 『韓國人の發想』. 徳間書店, 1995. ; 『韓國-反日症候群』. 亞紀書房, 1995. ; 『朝鮮半島 21世紀への深層』. 東洋經濟新報社, 1997. ; 『韓國人の歴史觀』. 文藝春秋, 1999.
- 24) 『海峽を越えたホームラン』. 雙葉社, 1984. ; 『ソウルの學習問題』. 情報センター出版局, 1984. ; 『東京からきたナグネ 韓國的80年代誌』. 筑摩書房, 1987. ; 『ソウルの練習問題 異文化への透視ノート』. 新報社, 1988. ; 『東京から来たナグネ 韓國80年誌』. 筑摩書房, 1988. ; 『韓國讀本』, 日本ペンクラブ 編 福武書店, 1988.
- 25) 『ソウル讚歌 ある韓國留學記』. 田畑書店, 1984. ; 『韓國民族主義論序説』. 影書房, 1984. ; 『ソウル讚歌』. 集英社, 1988. ; 『韓國社會の轉換』. 御茶の水書房, 1988. ; 『韓國現代史をどう見るか 瀧澤報告をめぐって』. 『朝鮮問題』 懇話會, 1994.
- 26) 『分斷時代の民族文化 韓國』. 社會思想社, 1979. ; 『韓國民衆の道 精神・生活・歴史』. 三一書房, 1980. ; 『韓國民衆をみつめること』. 創樹社, 1981. ; 『北の友へ南の友へ: 朝鮮半島の現状と日本人の課題』. 御茶の水書房, 1987. ; 『金日成と滿州抗日戰爭』. 平凡社, 1992. ; 『朝鮮戰爭』. 岩波書店, 1995.
- 27) 『ソウル實感録』. 北洋社, 1975. ; 『ソウル實感録』. 北洋社, 1979. ; 『常識的朝鮮論 のすめ』. 朝日新聞社, 1981. ; 『韓國政治を透視する』. 亞紀書房, 1992.
- 28) 『チョルムニ 韓國の若著たち』. 早川書房, 1988. ; 『ソウル「宴のあと」(特集 韓國の選譯)』. 1988. ; 『ふだん着のソウル案内』. 晶文社, 1988.
- 29) 예를 들면, 姜東鎮(전 일본쓰쿠바대학교 교수), 『日本の朝鮮支配政策史研究: 1920年代を中心として』. 東京大學出版會, 1979. ; 『일제 언론계의 한국관』. 일지사, 1982. ; 『日本言論界と朝鮮 1910-1945』. 東京大法政大學出版局, 1984. ; 『韓國から見た日本近代史(上,下)』. 青木書店, 1987. ; 『한국을 장악하라: 통감부의 조선침략사』. 아세아문화사, 1995.
- 30) 池東旭의 다음과 같은 저작을 들 수 있다. 『どうなる朝鮮半島と日本』. 草思社, 1991. ; 『テラスで讀む韓國經濟物語』. 日本經濟新聞社, 1992. ; 『軍服を脱いた韓國 氣になる隣人』. 時事通信社, 1994. ; 『變わる韓國變わらぬ코리아』. 時事通信社, 1996. ; 『韓國の族閥・軍閥・財閥 支配集團の政治力學を解く』. 中央公論社, 1997. ; 『在日をやめなさい』. ザ・マサダ, 1997. ; 『코리아クライシ스 朝鮮半島の危機!』. 時事通信社, 1998. ; 『韓國・IMF改革1年の決算 ジェトロ講演會』. 日本貿易振興會, 1999.
- 31) <日韓文化交流基金>이 소장하고 있는 목록에는 사회과학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학자와 전문가가 상당수 있다. 즉, 역사 123명, 경제·산업·통상 65명, 정치·외교 40명, 사회 59명, 교육 21명, 행정 5명, 법 9명, 문화예술 30명, 지리 8명, 어문학 145명, 사상 10명, 종교 11명, 기타 45명 등, 모두 571명에 이른다. 이 자료를 중심으로 '가. 사회'뿐만 아니라 '나. 교육/ 다. 행정/ 라. 법률' 분야에서도 그 명단을 발췌하여 각 항에 수록하기로 한다.

- 谷田澤典子 (櫻花學園大學 人文學部 教授) : 社會學 家政學
- 駒込武 (お茶の水女子大學 人間文化研究科 助教授) : 사회학, 인간문화연구
- 磯崎典世 (學習院大學 法學部 助教授) : 한국정치경제사회학(복지관계 포함) 한국현대사
- 冷水豊 (上智大學 文學部 教授) : 사회복지사회노년학
- 大畑裕嗣 (流通經濟大學 社會學部 教授) : 사회학
- 渡辺良智 (青山學院女子短期大學 教授) : 사회학(사회복지관계 포함)
- 瀬地山角 (東京大學 大學院 総合文化研究科 助教授) : 사회문화연구
- 福岡安則 (埼玉大學 教養學部 教授) : 사회학
- 山根眞理 (愛知教育大學 教育學部 助教授) : 가족사회학
- 山中美由紀 (龍谷大學 社會學部 助教授) : 사회학
- 小林和美 (大阪教育大學 教育學部 助教授) : 사회학(사회복지관계 포함)
- 松本誠一 (東洋大學 社會學部 教授) : 문화인류학, 사회학
- 愼英弘 (花園大學) : 사회사업사·장애자복지
- 辻村明 (流通經濟大學 社會學部 名譽教授, 客員教授) : 교육, 사회심리학, 사회학
- 安田雪 (立教大學 社會學部 助教授) : 사회학, 산업구조
- 御堂岡潔 (東京女子大學 現代文化學部 教授) : 異文化커뮤니케이션사회학
- 栗木安延 (專修大學 經濟學部 教授) : 사회운동과 사회정책 일본형 노사관계와 현상
- 栗原孝 (亞細亞大學 國際關係學部 教授) : 사회학(사회복지관계 포함)
- 二階堂裕子 (大阪市立大學 大學院 文學研究科) : 사회학(문화인류학)
- 在々木正道 (兵庫教育大學 學校教育學部 教授) : 비교사회학
- 中村律子 (中京大學 社會學部 助教授) : 사회복지
- 眞鍋祐子 (秋田大學 教育文化學部 助教授) : 종교사회학, 문화인류학, 조선연구
- 嵯峨座晴夫 (早稻田大學 人間科學部 教授) : 사회학 인구학 사회통계학
- 崔仁宅 (宮崎公立大學 人文學部 助教授) : 사회인류학
- 湯川良川 (大阪市立大學 文學部 教授) : 심리학(인지발달)
- 平田順治 (九州産業大學 國際文化學部 教授) : 사회학(사회복지관계 포함), 문화인류학

### 3) 양국 간 주제별 비교 분석

사회분야에서 <표 2>와 같이 11개의 주제로 분석하면, 한국의 경우, 사회정책 28%, 사회문화 23%로서 2개 주제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 나머지는 10%내외로서 각 주제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가족, 성(gender), 커뮤니케이션 등의 자료가 사회적 통념과 달리 거의 없는(1.1%) 것은 의외라고 하겠다.

<표 2> 사회연구에 관한 주제별 분석

주제 분야	한국의 일본연구		일본의 한국연구	
	종수	비율(%)	종수	비율(%)
사회일반	33	11.9%	153	14.4%
사회철학/ 이론/ 사상	30	11.2%	49	4.6%
사회정책	74	27.6%	226	21.3%
사회운동 / 사회계급	15	5.6%	57	5.4%
사회복지(복지정책 포함)	23	8.6%	26	2.4%
가족 / 성(gender)	3	1.1%	6	0.6%
지역 / 국가	12	4.5%	108	10.2%
노동 / 산업	13	4.8%	107	10.1%
사회문화	61	22.8%	232	21.9%
커뮤니케이션	1	0.4%	3	0.3%
사회사	4	1.5%	93	8.8%
계	269	100%	1,060	100%

한편, 일본에서도 사회정책과 사회문화가 각각 21%로서 한국과 같이 출판량이 많으며, 그 다음 사회일반과 지역/국가, 노동/산업이 10%대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균형있게 발행되고 있는 것은 한국과 유사하다. 그리고 가족, 성과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한국처럼 매우 적다는 것도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 나. 교육분야

### 1)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한국의 학교교육과정에 최초로 '教育'에 관한 교과목이 설치된 것은 개화기였던 1895년 '漢城師範學校官制'에 의거 설립된 漢城師範學校에서였다. 그러나 이미 1886년 '育英公院'(English Royal School)의 교사로 와 있던 미국인 헐버트(H.B.Hulbert)가 1897년부터 1905년까지 한성 사범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교육'에 관련된 교과목을 맡아 수업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교재는 당시 駐日韓國公使館에 日本東京師範學校와 東京高等師範學校의 교과서와 교사용참고서를 구입하여 보내도록 訓令한 것으로 보아 일본의 교육자료를 참고, 이용한 것을 추측할 수 있으나 教師와 教材에 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sup>32)</sup>

1905년 일제에 의해 統監府가 설치되고, 1906년 '師範學校令'과 '師範學校令施行規則'에 따

32) 鄭在哲, "한국에서의 교육학연구의 역사와 동향", 《중앙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제8집(1998.12), 2쪽.

라 통감부가 한국교육을 專斷하던 때였기 때문에 교과목의 담당자나 교재 및 교과자료가 일본의 것을 그대로 전송된 것으로 짐작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져 있지 않아 그 내용을 연구하는 것이 교육계의 과제<sup>33)</sup>로 남아 있다.

한국에서 일본교육에 관한 자료는 식민지시대(제1기)뿐 만 아니라 해방이후부터 한일수교 시까지 단 한 책도 발견되지 않아 결국 한 세기에서 65년은 연구의 진공상태로 머물고 있다. 이러한 장기간의 휴면기가 지나고 제3기가 되면 15종이 발행되어 일본교육연구에 눈을 뜨게 되지만, 본격적인 일본연구는 전체의 88%(103종)가 발행된 제4기(1985년) 이후부터 시작한다.

교육분야 연구는 사회영역에서 가장 소외된 분야가 되어 있다. 100년 간 발행된 도서는 모두 118종에 불과해 사회영역에서 가장 침체(전체 17%)되어 있으며, 이 중 개별적으로 낸 저서도 52종(著者數는 40명)뿐이고, 나머지는 단체 등 기관에서 간행한 것들이다. 자료의 흐름에서 연구자들의 연구성향을 보면, 여기서도 '식민지교육'의 연구<sup>34)</sup>가 중심이 되는데, 이는 제3기적 연구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4기에 오면, 한국교육의 핵심쟁점은 '교육개혁'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이에 따라 정부관련기관은 개혁의 모델을 일본에 두고 그곳과 관련있는 자료를 개발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sup>35)</sup> 그밖에 教科書에 관한 자료<sup>36)</sup> 『일본대학안내』(교육개발원,1990), 『일본의 힘 교육에서 나온다』(국민일보,1993), 『평생교육』, 『학교붕괴실태 및 대책연구』(교육부, 1999), 『직업교육내실화』, 『신지식육성프로그램개발』 등과 같은 일본의 선진제도를 표방하는 실용적 자료가 많이 생산되었다.

이러한 연구서는 대부분 일본 유학파들이 귀국하면서 시작되었고, 학회활동도 이때부터 활발해진다. 예컨대, 1984년 한남대학교에 '한국일본어교육학회' (《일어교육》연1회 발행), 1985년 서울교육대학교에 '한국일본교육학회'(《한국일본교육학연구》연1회 발행), 1999년에 수원대학교에 '한국일본어교육학회'(《日本語教育研究》연2회 발행)등이 창설되어 한국의 일본관련 24개 학회 중 순수 '교육'관계 학회로서 새로운 시대의 일본교육학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33) 위의 논문.

34) 예를 들면, 손인수의 『日帝下 教育』(전, 근대사 각 5권, 1969)과 『日帝下 韓國植民統治』(공저), 『日帝의 教育理念과 그 運動』(1986), 『韓國教育史』(제1-2권, 1987)와 노영택의 『일제 하 민중교육운동사』(탐구당, 1979), 정재철의 『일제의 대 한국 식민지 교육정책사』(일지사, 1985) 등을 들 수 있다.

35) 이를테면, 나병헌의 『일본의 교육개혁』(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 1996)과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의 『일본의 교육개혁』(1996), 중앙교육평가원의 『일본의 교육개혁과 대학입시제도』(1998), 김종근의 『일본의 교육과정개발과 구성체제』(한국교원대, 1998), 대학교육협의회의 『일본의 대학개혁론 : 국제비교의 시각에서』(1998) 등이 이에 해당한다.

36) 예컨대, 김용길의 『日本小學校 國語教科書 解説書』[제1-6권,(일본어라인,1996)와 함께, 批判書로서 황백현의 『일본역사교과서 한국역사왜곡의 실제』(국민독서운동회, 1992), 국제교과서연구회의 『한일 역사교과서 수정의 제 문제』(백산자료원, 1994)등이다.

## 2) 일본에서의 한국연구

교육분야에 있어서 일본의 한국연구는 韓國語教育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1870년대 東京外國語學校에 朝鮮語學科가 생긴 후, 存廢를 거듭하다가 1927년 완전히 폐쇄되었다. 1897년 東京商業學校의 후신인 高等商業學敎 부속 外國語學校에 한국학과를 설치하였다가 1911년 명칭을 조선어학과로 바꾸었다. 1925년 天理外國語學校에 布敎를 목적으로 조선어학과를 설치한 후 이곳은 한국어교육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1926년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文學科에 조선어 및 조선문학강좌가 개설되었다.

한편, 한국에서 근대적인 교육제도가 도입된 것은 19세기말, 일본과 서구열강의 帝國主義 정책에서 비롯된다. 이때까지 郷校, 書堂 등에서 한문을 가르치는 구식교육뿐이었는데 1895년 부산에 처음으로 일본인의 교육시설로서 근대식 교육기관인 開成學校가 창립되었다.<sup>37)</sup> 여기에 사용되는 교재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日本語 그대로였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한 뒤에도 外務省, 防衛廳, 警察廳, 海上保安廳 등 정부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것을 제외하면 天理外國語學校가 유일한 한국어 교육기관이었다. 1950년에 천리의 국어학교는 天理大學으로 승격되고 패전으로 한국에서 귀국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朝鮮學會를 조직하여 연구를 계속하였다. 1960년대 이후 한국어를 가르친 대학은 天理大學과 京都大學, 大阪外國語大學, 東京外國語大學(현재는 쓰쿠바대학), 早稻田大學 등 다섯 곳뿐이었다. 그것은 패전 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고 동시에 상대국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도 소홀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2기가 시작되는 1965년 ‘한일조약’ 체결을 전후하여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1963년 大阪外國語大學에 조선어학과가 설치되기 시작하여 1974년 九州大學에 朝鮮史學科를, 1977년 東京外國語大學에, 1978년 富山大學에 조선어(문)학과를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29대학에 산발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쳤으며, 1987년에는 神田外國語大學에 한국어학과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sup>38)</sup> 이처럼 일본에서의 한국연구는 어학(言語)연구에만 치중될 뿐이고, 미국식 교육이론과 방법에 몰입되어 있는 한국교육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구흥미가 없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제2~3기까지는 연구활동이 없다가 제4기에 이르러서야 연구의 기지개를 편다. 즉 1990년부터 文部省의 대학개혁방침으로 國際文化學部の 등장과 함께 한국어 강의가 많아지고, 한국학은 東京을 중심으로 한 關東地方과 天理, 大阪을 중심으로 한 新瀉, 九州, 廣島, 名古屋 등지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sup>39)</sup>

37) 최정태, “공공도서관, 지난 한 세기와 앞으로 한 세기 : 개관 100주년을 맞이하는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을 생각하며”, 『부산시립시민도서관100년사』 (2002.[미간본]).

38) 三枝壽勝, “日本에 있어서의 韓國語教育 및 韓國學”, 『海外韓國學研究現況』 (水原大畿甸文化研究所) 1990. 14-31쪽.

39) 菅野裕臣,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한국학 현황과 대책”, 『해외 한국학진흥 워크샵 자료집』. (한국국제교류재단). 1994. 72-73쪽.

在日한국인으로 日韓교육정책과 한국교육의 사상적 이해를 위한 일본어 연구서가 출간되  
고<sup>40)</sup> 일본인에 의하여 일한교육교류 및 한국의 교육근대화에 관한 책들이 선을 보이기 시작하  
였다.<sup>41)</sup> 이와 같은 한국교육연구 도서는 모두 87종(저자 수 39명)이 되지만 한국의 117종 보다  
많이 되진다.<sup>42)</sup> 그밖에 한국교육을 연구하는 12명 학자들의 소속과 전공영역은 다음과 같다.

- 權在淑 (神田外語大學 外國語學部 韓國語學科) : 교육학, 조선어교육
- 南相瓔 (金澤大學 經濟學部 助教授) : 교육학 및 외국어·외국문학
- 丹羽孝 (名古屋市立大學 人文社會學部 教授) : 유아교육
- 稻葉繼雄 (九州大學大學院 人間環境學研究科 教授) : 교육학
- 藤井幸之助 (神戸女學院大學 非常勤講師) : 조선어교육·조선민족교육사
- 松尾智則 (中村學園大學短期大學部 助教授) : 비교교육학
- 岸田由美 (築波大學教育學系 準研究員 文部技官) : 교육학
- 影山禮子 (國際武道大學 體育學部 教授) : 교육학 사상사 일본사
- 田中圭治郎 (佛教大學 教育學部 教授) : 국제이해교육
- 鄭世華 (プール學院大學 國際文化學部 教授) : 교육학·철학·여성학(문화인류학적접근)
- 佐野通夫 (四國學院大學) : 朝鮮教育史
- 天野晴子 (青葉學園短期大學 助教授) : 생활경영교육학 교과교육

### 3) 양국 간 주제별 비교 분석

교육분야에서 한일 양국을 <표 3>과 같은 12개 주제별로 자료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한  
국은 일본에 관한 교육정책에 관한 자료가 전체의 32%에 달하여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교과과정/커리큘럼/교과교육이 17%, 대학교육이 13%를 점유하여 이 셋이 전  
체의 2/3를 차지한다. 교육의 원론을 다루는 교육철학/이론/사상/심리분야가 4종, 教育史가 1  
종으로 상대적으로 연구실적이 미진한데 비하여 일본의 교육정책과 대학교육, 커리큘럼 등의

40) 鄭世華의 『韓國女性教育理念研究』. 學志社, 1994. ; 『韓國教育古典의 理解』 良書院出版社, 1997. ; 『韓國教育의 思想的 理解』. 學志社, 1997.  
41) 예를 들면, 大槻建의 『韓國教育事情』. 新日本出版社, 1992. ; 『日韓의 未來をひらく 教育交流』. 桐書房, 1994.  
; 『韓國の子どもと教育 韓國教育研究』. あゆみ出版, 1997.와 稻葉繼雄의 『東京高等師範學校と韓國・朝鮮の  
教育』. 1984. ; 『東亞司文會の韓國における教育活動 築波大學プロジェクト研究報告』. 1985. ; 『大日本海外  
教育會の舊韓國における教育活動 昭和60年度築波』. 1986. ; 『舊韓末「日語學校」の研究』. 州大學出版會,  
1997. ; 『舊韓國の教育と日本人』. 九州大學出版會, 1999. 등이다.  
42) 4개 분야에서 일본의 한국연구가 가장 취약한(4.3%)분야이며, 동시에 한국과 대비해도 양적으로 열세하다.  
그 이유는 일본식 교육의 토양에서 미국식 교육방식이 접목되어 성장한 한국의 교육현상에 대하여 더 이  
상의 연구가치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실질적 자료가 월등히 많은 것은 한국의 당면한 교육문제를 일본으로부터 많이 구하고자 했던 것 같다. 결국, 한국이 일본에 대한 연구내용은 교육이론보다 일본의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에 관한 실무적 내용에 집착한다는데 그 특성을 찾을 수 있다.

<표 3> 교육연구에 관한 주제별 분석

주제분야	한국의 일본연구		일본의 한국연구	
	종수	비율(%)	종수	비율(%)
교육철학 / 이론 / 사상 / 심리	5	4.2%	6	6.9%
교육정책	38	32.2%	26	29.9%
교과과정 / 커리큘럼 / 교과교육	20	17.0%	3	3.5%
교육평가	4	3.4%	0	0%
교육공학 / 교육매체	10	8.5%	5	5.7%
사회교육 / 평생교육 / 도덕교육	8	6.8%	12	13.8%
유아교육 (유치원, 취학전 교육)	2	1.7%	0	0%
초등교육 (초등학교)	3	2.5%	3	3.6%
중등교육 (중·고등학교)	6	5.1%	5	5.7%
고등교육 (대학교육)	15	12.7%	2	2.3%
교육사	2	1.7%	2	2.3%
기타	5	4.2%	23	26.4%
계	118	100%	87	100%

반면에, 일본이 한국에 대한 연구도 같은 조건으로 주제별로 분석해 보면, 교육정책이 29%, 사회교육이 14%이고, 그 밖의 분야에서는 6~7%미만이며, 기타분야가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표 3>). 그 의미를 찾자면, 한국의 일본연구가 교육정책, 교과과정 등에 편향되어 있는데 비해, 일본에서의 한국연구는 그 1/4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기타주제(27%)를 택해 연구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쌍방 간 연구방법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 다. 행정분야

### 1)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한국의 정치와 행정의 전통을 고찰할 때, 고대 檀君國祖의 개국에서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의 臺諫制, 科擧制度, 사심관제 등으로 麗朝의 전제세력을 견제하는 민주주의적 遺風으로 조선왕조에까지 계승해오다 근 반세기간의 일제 식민통치시기는 한민족의 장구한 역사에서 韓



民族 主體性의 단절을 의미한다.<sup>43)</sup>

1905(光武9)년 11월 18일 제2차 韓日協約으로 체결된 이른바 ‘乙巳條約’은 일본이 한반도에 統監府를 설치하여 5년 간 통감업무를 시작하면서 식민정책에 필요로 하는 외교와 행정법규를 자유자재로 만들고, 1910년 8월 29일 朝鮮總督府를 설치하여 35년 간 식민통치행정을 펴면서 연 1만 450호에 面數로는 14만 515면에 달하는 『朝鮮總督府官報』를 발행하였다.<sup>44)</sup> 그리고 총독부는 관련단체와 학자를 동원하여 2천 3백여 종의 간행물을 생산하여 통치행정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용하였다.<sup>45)</sup>

해방이후, 한국은 일본에 대한 식민잔재를 털어 내지 못하고 따라서 행정연구도 거의 없었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1948년 정부간행물로서 법무부가 『日本 法務省의 組織과 機能』을 처음 발행하였고, 그 후 14년이 흐른 뒤 강신주, 최경주 공저 『일본관리』(서울, 수학사, 1962)가 첫 번째 발행한 민간간행물로 기록된다. 그리고 또 10여년 후 1970년대에 오면 일제시대 통치연구서<sup>46)</sup>같은 자료와 1980년대 건설부, 국토개발연구원 등에서 간행한 『일본의 주택문제』, 『일본의 토지정책』, 『일본의 국토개발』 등 일본의 발전적 모델을 대상하는 자료가 많은 것이 특징 중의 하나이다.

계량적으로 본 한국에서의 일본 행정에 관한 연구는 제2~3기까지는 연구서가 거의 없다. 그러나 제4기에 오면 전체 83%에 해당하는 229종이 발행되어 연구의 폭도 그 만큼 넓어진다.<sup>47)</sup> 사회·교육분야에 그렇듯이 한국의 일본행정연구는 1985년 이후 제4기에 와서 거의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간행의 출처 면에서 볼 때 행정 전 분야 273종 중에서 90종(저자 수 86명)만이 민간인에 의해 출판되고, 그 중 2/3가 정부간행물이라는 것도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 2) 일본에서의 한국연구

제1기, 식민통치시기에 內田達孝가 조선행정법과 경찰행정에 관한 4종<sup>48)</sup>과 車田篤이 조선 지방자치제도, 警察法論 등 6종의 저서를 발행한 일이 있으며<sup>49)</sup>, 그 후 반세기간의 한국행정

43) 김운태, 오석홍, 『韓國行政史』.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5. 389쪽.

44) 崔貞泰, 『한국의 官報』. 69쪽.; 1987년 『朝鮮總督府官報』를 어느 민간출판사에서 142책으로 影印出版하였는데, 당시 《서울신문》(1987.10.13)에서는 한국출판사상 최대규모의 간행물이라고 하였다.

45)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 분석된 자료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기로 한다. (崔貞泰, “朝鮮總督府의 知識情報政策과 『事物分析』” 참조)

46) 예컨대, 서울대행정대학원 김운태교수의 『해방30년사』. 한국사료연구원, 1970; 『일제식민통치연구서론』. 대구사학회, 1977;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1986, 1998. 같은 책들이다.

47) 일본 행정연구의 소주제는 官僚行政, 연금제도, 관세행정, 지방공무원교육, 행정개혁, 약무행정, 토지, 地價問題, 교통행정, 주택임대, 청소년보호제도, 홍수방지대책, 환경문제, 도시 및 농촌행정 등 매우 다양하다.

48) 『朝鮮警察行政法論』. 1921.; 『朝鮮行政法』. 1933.; 『朝鮮行政法概要』. 1933.; 『司法警察의 理論と實務』. 1936.

49) 『朝鮮地方自治制度要義』. 1931.; 『朝鮮警察法論』. 1931.; 『朝鮮刑務司組合論』. 1932.; 『朝鮮行政法論』. 1934.; 『朝鮮金甌聯合聯合會論』. 1934.; 『朝鮮戶籍令義解』. 1937.

연구의 공백기를 거친 후, 최근에 와서 深川博史(九州大學 經濟學部 助教授), 若山浩司(四國大學 經營情報學部 教授), 齋木崇人(神戸藝術工科大学 藝術工學部 教授), 萩島哲(九州大學 大學院人間環境學研究科 教授)등이 한국의 농지정책, 지방재정, 건축계획, 도시정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제1기부터 제4기까지 발행된 620종 중 한국의 構成比보다 더 많은 83%가 政府刊行物로 되어있고, 개인저서는 102종(저자수 93명)뿐인 것이 밝혀졌다. 그밖에 알려진 한국행정에 관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다.

- 深川博史(九州大學 經濟學部 助教授) : 한국의 農地정책, 그린벨트, 임대차 제도
- 若山浩司(四國大學 經營情報學部 教授) : 地方財政 都市經營 都市問題
- 齋木崇人(神戸藝術工科大学 藝術工學部 教授) : 건축계획(도시계획)환경디자인, 전원경관·농촌계획
- 萩島哲(九州大學 大學院人間環境學研究科 教授) : 도시계획, 경관평가

그리고 단체연구 기구로서, 1893(明治26)년 창설된 <帝國地方行政學會>가 日帝時代 <朝鮮支部>를 설치하여 조선의 행정연구를 전담한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을 지역연구의 한 대상으로서 부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밖에 유사한 學會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3) 양국 간 주제별 비교 분석

행정연구에 있어서 <표 4>와 같이 6개의 주제별로 구분하여 한국에서의 일본행정연구 상황을 주제별로 보면, 전체자료의 약 절반(47%)이 실무행정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다. 그 대부분은 현지 방문을 기록한 것이거나 현장 실무에 관한 조사보고서들이다. 그것은 경제성장과 함께 지리적 '가까운 이웃'으로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과 일본의 선진 행정제도를 관찰할 기회가 다른 어느 곳보다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4기에 와서 한국의 지방자치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를 연구하는 자료가 18%를 차지한 것도 한국의 정치발전과 무관하지 않고, 20%에 접하는 비교행정도 최근에 와서 한국이 경제발전과 더불어 많은 여행과 인터넷을 통한 선진국 세계를 체험하고 비교 관찰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 행정연구에 관한 주제별 분석

주제분야	한국의 일본연구		일본의 한국연구	
	종수	비율(%)	종수	비율(%)
행정일반	9	3.3%	30	4.8%
행정이론/ 사상 / 철학	13	4.8%	21	3.4%
실무행정(행정보고서, 시찰기록 등)	129	47.3%	527	85.0%
비교행정	56	20.5%	2	0.3%
중앙정부 / 중앙행정	13	4.8%	16	2.6%
지방자치단체 / 지방행정	49	17.9%	15	2.4%
행정사	4	1.4%	9	1.5%
계	273	100%	620	100%

한편, 일본에서의 한국행정에 관한 자료는 실무행정에 관한 자료가 한국보다 월등하게 많은 85%가 이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이러한 자료가 제4기에 와서 급증하는 것을 보면, 국가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저변에서까지 파트너십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 라. 법률분야

### 1) 한국에서의 일본연구

일본법이 주로 西洋法에서 수용되고, 그 법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는 것이 법학계의 정설이다. 1881년(高宗18) '紳士遊覽團'이 일본의 근대화 현황을 각 부문별로 시찰하고 그 제도와 인상을 문집으로 정리하였다. 일본 司法省을 시찰한 嚴世永은 1881년 일본의 사법제도와 법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日本司法省視察記』 7책을 기록해냈다.<sup>50)</sup> 이것은 법제도 분야에서 한국인에 의한 최초의 일본연구서로 추정된다.

韓末의 法學은 기울어져 가는 국운을 바로 잡기 위한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1908년 '法學協會'를 창립하여 월간지로 『法學協會雜誌』를 발행하였다. 1910년 8월 韓日合邦이후 활동이 중지되다가 1915년 재개한 후 『法學界』로 개칭하여 모두 6호까지 발행하였다.<sup>51)</sup>

1948년 한국정부가 수립되었지만 한국의 법제가 그러하듯이 法學도 식민지시대의 잔재가 그대로 지속되어 한국에서의 일본연구는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sup>52)</sup> 법학계에서 일제잔재

50) 丘秉淵, "韓國에 있어서 日本公法研究 어디까지 왔는가", 《日本學報》 제30집(1993.5), 59쪽.

51) 崔鍾庫, 『韓國法學史』, 박영사, 1990, 429-467쪽.

52) 韓相範, "한국법의 계보와 사상: 일본법과 한국법", 《亞·太公法研究》 제8집(2000.12), 5-27쪽.

청산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한상범은 우리나라 법학의 생태적 식민성에 대해 “해방 후 美軍政 하에서 일본법령 및 법제행정 체계를 답습한 데다가 교수요원이 전무하다시피 해 일제 때의 관리나 대학졸업자들이 일본법령, 일본판례, 일본교과서로 법학교육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일본제국주의 잔재가 한국의 법문화에 그대로 녹아 있다고 말한다.<sup>53)</sup>

그 영향은 제3기 중반, 1970년대 말까지 계속 되었다. ‘韓日法學會’(1979년)가 창립되어 일본유학파들을 중심으로 한일관계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지만 《한일법학연구》(연 1회 발행) 이외에 이렇다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서 일본에 관한 단행본으로서 1953년 법제처에서 낸 『現行各國憲法典』 속에 日本憲法이 최초로 우리말로 소개되었고, 1964년 국회도서관이 立法參考資料로 발행한 『日本中小企業基本法の 成立過程과 關係法令』이 단일국가 일본 연구로는 처음이다. 그 이후부터 법제처 등 정부기관이 일본에서 법률 각론을 소개하는 안내 자료가 많이 발행되었다.<sup>54)</sup>

이러한 소개자료와 함께 제4기가 되면 학자들의 일본분석 자료가 일부 교수들에 의하여 발행된다. 즉 정재길<sup>55)</sup>과 한상범<sup>56)</sup> 그리고 비교법학을 연구하는 법조인이나 일본법의 각종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여 법률전체 242종에서 190종(79%)이 이때 생산되었다. 조사에 의하면 전체 242종 중 48종(저자 수 45명)은 개인에 의하여 출간 된 것이고 나머지 80%는 모두 정부기관 또는 단체에 의해 간행된 것이다.

## 2) 일본에서의 한국연구

日本帝國은 1905년 統監府를 설치한 이후 1910년 朝鮮總督府를 설치하기까지 5년 동안 朝鮮을 대상으로 시행 공포한 법규만 하여도 2,150건에 이른다.<sup>57)</sup> 그리고 朝鮮總督府와 관련단체가 발행한 법률관계 기본도서를 상당수 간행하였다. 1923년 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를 설립한 후, 法學會를 설치하여 법률, 경제, 정치학자를 중심으로 학술지 『論集』과 단행본 등을 발행<sup>58)</sup>하

53) 한상범,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 교육과학사, 1994. 377쪽.

54) 이를테면, 『법제자료 : 일본편』. 법제처, 1971. ; 『日本の 獨占禁止法』. 대한무역진흥공사, 1975. ; 『日本の 貿易關係法制』. 한국무역협회, 1977. ; 『日本の 相續稅法』. 재무부, 1984. ; 『日本の 立法』. 법령편찬보급협회, 1990. ; 『日本の 各種環境法』. 국회 환경보전대책위, 1993. ; 『日本の 證券關係判例』. 증권감독원, 1995. ;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 2000. 등이다.

55) 『일본의 지방자치법』. 교학사, 1992. ; 『일본의 지방의회』. 한일지방자치연구소, 1992. ; 『신일본 창조의 주역 : 호소카와 그는 누구인가』. 고려원, 1994.

56) 『禁書を 통해본 近代思想史』. 정음사, 1976. ;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 교육과학사, 1994. ; 『일제 잔재, 무엇이 문제인가』. 법률행정연구원, 1996.

57) 『統監府法令資料集』. 國會圖書館, 1972-73. 3책(1,922쪽)에는 공포된 총 법령건수가 명시되지 않아 재조사 하였다.

58) 제1책 : 京城法學論集(刀江書院, 1928), 제3책 : 私法을 중심으로(刀江書院, 1930), 제4책 : 法政論纂(刀江書院, 1931), 제5책 : 法政論纂(刀江書院, 1932), 제8책 : 判例와 理論(刀江書院, 1935), 제9책 : 朝鮮社會法制史研究(岩波書店, 1937) 제11책 : 法과 政治의 諸問題(岩波書店, 1940) / 崔種庫, 앞의 책, 451-456쪽

였는데, 이들 책에서는 단편적인 논문형식으로 조선의 法制度와 사회분야를 다루고 있다.

학자 개인으로 볼 때, 식민지 시기 朝鮮의 法制史를 연구하는 廣池千九郎<sup>59)</sup>와 刑事法을 연구하는 野村調太郎<sup>60)</sup> 그리고 家族法을 하는 本渡諒<sup>61)</sup> 등이 간행한 3~4편의 책들이 그 대표적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終戰후 단절의 시기에 한국 법률연구는 황무지를 이루다가 제3~4기에 오면 다시 한국에서처럼 기존법의 확인과 현행제도연구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sup>62)</sup> 이러한 연구는 상대국을 이해하는 기본단계로 볼 수 있는데 내용의 폭이나 깊이 그리고 분량에 있어서는 식민통치시기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친다. 일본의 법률관계 한국연구서 258종에서 147종(60%)은 정부간행물 내지 기관간행물이고, 나머지 96종(저자 수 80명)은 순수 민간인에 의해 출판되었다. 이밖에 저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의 한국 법 관련 연구자는 다음과 같다.

- 國分典子(愛知縣立大學 文學部 助教授) : 공법학·기초법학 사상사
- 大杉覺(東京道立大學 法學部 助教授) :
- 西尾昭(同志社大學 法學部 教授) : 행정법, 한국·북조선법
- 西村峯裕(京都産業大學 法學部 教授) : 민법 현대아시아법
- 中山武憲(名古屋經濟大學 法學部 教授) : 독점금지법, 한국독점금지법
- 志村治美(京都學園大學 法學部 名譽教授) : 일본·중국·한국 및 베트남에 있어 사회법  
상업 등기제도, 사회법
- 蒲章則(山形縣立保健醫療短期大學 助教授) : 공중위생(국제보건학) 국제법

### 3) 양국 간 주제별 비교 분석

법률연구에서 <표 5>와 같이 8개 주제에 따라 계량적 발행량을 분석해 보면, 한국에서는 60%가 法 제정과 제도에 관한 서적이다. 그 다음 公法에 관한 자료가 16%이고, 법령, 법규 등의 자료가 약 13%이다. 일본에서도 법 제정, 제도에 관한 자료가 한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체의 33%로서 1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59) “支那法制史餘論 韓國親族法規等制度の研究”, 《法理論叢》第14編(1909). ; 『東洋法制史本論 : 支那朝鮮親族法并ニ喪服制度』. 早稻田大學出版部, 1915. ; 『東洋法制史序論』, 『東洋法制史本論』. 道德科學研究所, 1937. ; 『廣池博士全集(第3冊)』. 廣池學園事業部, 1975.

60) 『朝鮮戶籍令義解』. 1923. ; 『朝鮮刑事法令』. 1926. ; 『朝鮮民刑事令』. 1929. ; 『新案 朝鮮六法』. 1933.

61) 『韓國商標制度の解説』. 發明協會, 1983. ; 『韓國婚姻法の實務』. 日本加除出版, 1986. ; 『韓國家族法の實務 婚姻·離婚·親子·相続』. 日本加除出版, 1992.

62) 구체적으로 『韓國의 租稅制度』, 『現代韓國의 憲法理論』, 『定住外國人과 家族法』, 『韓國의 特許法』, 『韓國親族相續法』, 『日韓立法의 新展開』, 『韓國의 勞動法』, 『韓國民事訴訟法』 등 한국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다분히 實務的인 자료들이다.

법을 公法과 私法을 구분하여 양국을 비교하면, 한국이 16% : 5% 인데, 일본은 8% : 12%로 양국의 법 연구영역에서 서로 상치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판례자료로서 한국이 4종에 불과한데 비하여 일본은 37종으로 9배의 차이가 나며, 한국의 법원자료가 전무한데 비해, 일본은 7종이 되어 균형성에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법률연구대상에서 방법상의 상이점에 대하여 후속논문으로 다시 고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법률연구에 관한 주제별 분석

주제 분야	한국의 일본연구		일본의 한국연구	
	종수	비율(%)	종수	비율(%)
법철학/ 이론/ 사상	8	3.3%	30	11.6%
법제정 / 법제도	147	60.7%	84	32.6%
공법	39	16.1%	20	7.8%
사법	11	4.6%	32	12.4%
법학사 / 법제사	2	0.8%	10	3.9%
법령 / 법규 / 규정	31	12.8%	38	14.7%
판례	4	1.7%	37	14.3%
법원자료	0	0%	7	2.7%
계	242	100%	258	100%

#### 4. 요약 및 결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사에서,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에는 지울 수 없는 汚辱의 40년이 있었다. 그 후 20년간 斷絶의 시간이 있었고, 또 20년 간은 상호 이해를 위한 探索의 기간이 있었다. 최근에 와서 양국은 서로가 필요로 하는 交隣의 시대가 와서 이웃으로 연구하고 확인하는 단계에 와 있다.

지금 국내에는 94개의 일본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46개교의 석·박사학위과정에서 연구활동을 매진하고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자검색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지식정보분야에서 '일본' 관련 논문주제가 단 한편이라도 있는 연구자는 사회분야 389명, 교육학 719명, 행정학 274명, 법학 36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www.krf.or.kr) 그럼에도 최근 日本國際交流財團에 의하면 실제 일본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조사되었다. 실례로 이들에게 일본연구와 관련된 著作(논문) 3권을 쓰라는 항목을 보면 대부분 '빈칸'이어서 우리의 知的 怠慢을 수치로 보고있다<sup>63)</sup>고 하여 우리나라의 열악한

63) 《월간중앙WIN》 제39집(1998.8), 188-191쪽.

연구환경을 지적하고 있다.

이 논문은 '20세기 한일간 지식정보의 생산과 흐름'이라는 대 주제가운데, 사회영역 중 특히 사회·교육·행정·법률분야에서 양국학자들이 생산한 학술적 성격의 단행본을 중심으로 지식정보의 흐름을 확인해 보았다. 조사결과, 한국에서 일본을 대상으로 논문이외에 단행본 1종 이상을 간행한 학자 수는 사회분야 120명, 교육분야 40명, 행정분야 86명, 법률분야 45명으로서, 모두 291명이다. 이 들을 포함해서 생산주체인 정부기관, 관련학회, 단체들이 생산한 단행본 수는 모두 902종으로 집계되었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제1기 식민통치시기에는 1종 발행, 제2기에는 11종(1.1%)으로 생산간행물이 거의 없다가 제3기 134종(14.9%)을 발행하고 제4기에 오면 750종(83.1%)으로 발행량이 급증한다. 1세기 동안 한국에서 일본연구는 40년의 식민지시기와, 20년의 단절시기, 그리고 20년의 탐색의 시기를 그쳐 보내고, 20세기 후반부에 거의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같은 분야에서 1세기 동안 일본에서 한국연구는 2,025종을 발행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학자 수는 사회 417명, 교육 39명, 행정 93명, 법률 80명으로 모두 549명이 집계되었다. 시기별 생산량을 보면, 제1기 1,193종(59%), 제2기 12종(0.6%), 제3기 162종(8%), 제4기 514종(25%), 발행년미상 144종으로 한국전체 출판량과 참여저자수에서 약 2배가 높게 나타난다.(<표 1>)

이상의 실적을 시기별 배경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한일관계사 100년에서 한국의 일본연구는 85년 간 휴면기를 보내고 그 후 15년 동안 전체의 83%의 연구물이 생산되는데 비해, 일본은 60%의 지식자료가 20세기 초 40년 동안 식민통치시기에 생산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하면, 20세기 100년에서 해방(終戰)을 기준으로 기간을 兩分했을 때 전반기 45년은 일본의 한국연구가 지배적으로 앞선 반면, 후반기 55년은 한국의 일본연구가 앞서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태까지 언론등에서 제기해온 '한국의 일본연구 劣勢論'에 대하여, 적어도 계량적 연구분량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수정되어야 한다.

양국에서 생산한 지식정보자료의 현황을 4개의 분야별로 각각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분야에 있어서 한국인에 의한 일본연구는 해방이전 세대와 해방후 세대로 양분된다. 전자는 '식민지 시대 연구'와 '과거 왜곡된 사실 수정' 중심으로 주제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 후자는 실용성에 입각 현실연구 및 미래연구를 하는데 있다. 이들 소 주제 발행실적을 보면, '사회문화'가 23%, 그 다음 '사회정책'이 2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한국연구자는 순수일본인과 재일동포가 중심이 된다. 순수일본인의 저술은 한국의 현실, 현안사항을 중점으로 하고 남북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원로급 재일동포 학자들은 과거 식민지시대를 비판하는 자료가 주류를 이룬다. 소 주제 발행실적은 '사회문화'가 22%, 그 다음 '사회정책'이 22%이다.

둘째, 한국의 일본교육연구는 제4기 이후 집중되어 전체 118종 중 103종(87%)이 이때 간행되었다. 제1~3기 80여년 동안 일본교육연구는 불과 15종일 뿐더러 주제가 '일제 하 식민지 시대 교육'과 '일제의 교육이념'을 내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제4기 이후

부터 일본을 유학한 젊은 학자들에 의해 생산된 '일본의 교육정책'연구가 32%로 가장 많다. 그러나 일본의 한국연구의 특징은 '한국어교육'에 중점을 둔다. 1960년까지 5곳이던 한국어교육기관이 제4기 이후 文部省 大學改革方針으로 東京을 중심으로 한 관동지방과 天理, 大阪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어학교육'에 편중되어 한국교육의 본질연구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저조하다. 한국의 교육현실에 대한 더 이상의 연구가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행정분야에서도, 한국은 사회, 교육분야와 같이 제1~3기까지 발행된 자료가 빈약하다. 제4기에 와서 229종이 생산되지만, 제1~4기를 통해 일본을 연구하여 3종이상의 저서를 낸 사람은 한 두 사람에 불과하고, 그것도 식민지시대의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또한 生産主體面에서도 전체의 2/3가 정부간행물로서 행정연구서, 실무보고서 등이고, 주제내용도 실무행정을 다룬 것이 전체의 약 절반(128종)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한국행정연구는 모두 620종으로 한국(273종)에 비해 계량적으로 2배가 넘는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연구중심의 자료가 빈약하고 대부분이 '실무행정'자료로서 전체도서의 85%(522종)을 차지한다. 양국의 열악한 연구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서 연구의 질을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의 일본법 연구자는 극히 제한적으로 보이고, 연구학회도 1979년에 창설된 '한일법학회'(고려대학교)가 유일하다. 학자들의 저조한 실적과 달리 法制處, 國會圖書館 등 법률 유관기관이 행정실무와 입법참고자료용으로 일본의 법 각론을 다룬 책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한국 법 관련도서도 전체 258종 중 191종(전체의 3/4)이 식민통치시기에 발행되어 사회영역 전반의 발행비율과 유사하다. 나머지 67종(1/4)은 모두 제2기(1945년)이후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것이어서 소외된 공간으로 남아 있다. 양국은 비워진 공간을 다시 복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사회영역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지식정보의 생산경향이 시기적으로 한국은 제4기부터 일본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승곡선을 보인 반면, 일본은 제1기 식민통치시기의 발행량이 전체의 59%를 차지했고, 그 이후부터 완만한 곡선을 보였다. 특히 최근(제4기)에 와서, 한국의 일본연구는 계량적으로 일본에 비해 오히려 68.6%가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양국의 지식정보생산에 따른 물적 확인은 이번 연구에서 찾아낸 조그마한 성과중의 하나이다.

다음, 한국의 일본연구 주체를 해방전 세대와 해방 후 세대로 兩分했을때, 전자는 과거 식민지시대 비판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후자의 경우 실용성에 입각하여 현장개척 내지 현상연구에 주안을 두는 경향이 많았다. 그리고 연구내용과 방법의 전문성에서 서로를 비교하면, 한국의 일본연구자는 연구테마를 광범위하게 잡는 반면, 일본의 한국연구자는 미세한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특징을 보였다는 것이 또 하나의 발견이었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